

“방사성 물질 200개 중 62개 걸러내 안전?” 지역민 분노

일본 오염수 방출 결정에 광주·전남 지역사회 ‘방사능 공포’

오염수 125만t 정화 역사상 전례 없어 불신...전남 유입 땀 치명타 환경단체·어민들 “바다가 만능 폐기물 처리장이냐” 즉각 철회 촉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사고 때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의 한빛원전 부설 운영으로 인한 불신이 커져 있는데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와 인근 해역의 세슘·스트론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농도와 관련된 정보가 일본이 발표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염수 정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등 지역 탈핵·환경단체는 14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바다는 만능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다. 즉각 오염수 배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단체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정화를 통한 해양 방류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특이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전례가 없는 정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방사능 오염물질 확산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 목소리다.

◇수용량 600개 규모의 오염수 125만 t, 역사상 정화한 전례 없어-일본 정부는 현재 1000여개의 저장탱크에 125만 t의 오염수를 보관중이다. 올림픽 규격 수용량 60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정화시킨 뒤 바다로 내보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만한 규모의 오염수를 처리해 정화한 적도 없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만큼 실현 가능성

여부도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사성 농도 수치 등을 주변국에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화해 내보내고 있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김중필 광주환경연합 사업국장은 “오염수 양이 올림픽 규격 수용량 600개를 채우고도 남은 양으로 대량의 오염수 방출은 기술적, 비용측면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방사성물질 200종 중 62개만 제외하면 나머지 물질은-일본 정부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하고 여기에 물을 더해 오염수 농도를 희석시킨 뒤 방류하면 국제 기준치를 밑돌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만 대략 200여개가 넘는다. 여기에서 62개를 제외했다고 하지만 완전히 제거됐는지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나머지 140여종의 방사성 물질은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보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물속에 녹아 든 삼중수소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는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배출 기준 밑으로 떨어뜨려 방류하겠다고 했지만 ‘완벽한 제거’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염된 수산물을 통한 축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정화해 제거한다는 62종의 방사성 오염물질은 오염수 내 200여개 방사성 물질의 일부로 이마저도 오염수 검사 결과에 대한 원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제거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방류하면 국내 유입 가능성은?-어민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당장,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겪었던 피해가 되풀이될까 봐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오염수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등 환경단체들이 14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배출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방류로 인한 수산물 피해를 월평균 160억~3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정대로 일본 정부가 2년 후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이 물은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을 거쳐 북대평양을 돈 뒤 4~5년 뒤 근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국내 동해 입구에 후쿠시마 세슘(Cs 137)이 도달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방출 후 약 5년 뒤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방류한 오염수가 태평양 쪽이 아니라 적도 쪽으로 흘러가다가 더워지면 남중국해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6개월~1년 이면 제주도 남해안, 서해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원자력전문가들 지적이다.

정경섭 김산업연합회장은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출 계획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조류 생산량 전국 90%를 책임지고 있는 전남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만큼 국가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다”고 말했다.

한빛원전이 들어서 있는 영광지역 시민들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당장 다음주에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오염수 배출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박응섭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소장은 “한빛원전이 있는 영광지역민들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관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 우선 바다가 오염되기 전 해양양역조사를 추진해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송중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오염수 방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근접국가의 불안감을 불식 시키기 위한 정보·자료 공유 등 오염수 방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진행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운암동 스쿨존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자 7년 구형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일가족을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지선을 지키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한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달 18일 열린 현장검증 과정에서 횡단보도까지 진입하지 않고 미리 정차했을 때와 횡단보도에 진입해 멈췄을 때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A씨 측 입장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A씨 측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는 등 자신의 잘못으로 사망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반대편 차로의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리고 있는 모습을 주시하느라 오른쪽에서 진입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도로에서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일가족을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학교급식에 일본 수산물 안 쓴다”

장휘국 교육감 밝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규탄하는 의미로 학교급식에 일본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교육감은 14일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바다방류 결정에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일본 수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방류한다는 방침이지만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이 걸러지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부를 오염시키는 해양방류가 아니라 탱크를 증설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바다는 모든 인류의 공동 소유이며, 미래 세대의 사회적 자산으로 모두의 바다를 더럽힐 권리는 일본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할 수 있는게 없다더니...차량 스토킨 남성 구속

경찰, 경범죄·특수재물손괴 등 적용

차량 스토킨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돌려보낸 서부경찰 <광주일보 4월 1일 6면> 이가해 남성을 구속했다.

광주서부경찰은 14일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과 특수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A(3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전북 순창 강천사휴게소에서 마주친 한 여성의 차량을 뒤쫓아 45km 떨어진 광주시 서구 풍암파출소까지 따라온 혐의다.

경찰은 수심km를 쫓아온 남성을 피해 파출소를 찾아 불안감을 호소한 여성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서 소극적인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여론의 비판 이후 피해 여성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경범죄처벌법 상 불안감 조성 혐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해 입건한 뒤 지난 13일 다시 교통방해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A씨는 13일 오전 10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 1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광주와 광주, 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현수막 등 광고물을 훼손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